

私立大學 財政難 해결의 길

지금 모든 사립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大學 財政을 어떻게 하면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인과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해결과제이기도 하다.

대학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대학이 국제적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문대학도 국제 수준에서 보면 수백등의 위치에 놓여 있다. 경제발전 수준이 선진국 문턱에 있지만, 대학교육은 아직도 중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재정 문제, 특히 私立大學의 재정문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주장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하여 국가사회에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도 대학재정 투자는 시급하다. 천연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건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인력자원뿐이기 때문이다. 그 인력이 우수한 것일 때 선진화가 가능함은 말할 것도 없다. 우수인력을 기르려면 막대한 재정적 투입이 요구된다. 그러면 과연 막대한 사립대학의 재정수요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은 학생의 등록금, 재단전입(출연)금, 각계의 기부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된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學生 登錄金으로 사립대학의 재정 중 75%나 된다. 그러나 학생의 등록금도 선진국에 비하면 절대액에 있어서 아주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1년에 약 3백만 원이지만, 미국 유명 사립대학들은 우리 사립대 등록금의 6배 정도에 이르고, 일본도 약 3배의 등록금을 내고 있다. 영국도 대체로 3배 내지 7배의 등록금을 내고 있다. 즉, 학생등록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매우 높지만 절대액에 있어서는 많은 것이 아니다.

財團 轉入金은 전체 재정수입 중 약 14%에 이르고 있지만, 몇몇 재단이 큰 수익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적지 않은 전입금을 부담할 뿐이다. 대부분의 재단은 5%도 안 되는 전입금만 낼 뿐이고 거의 전입금을 내지 못하는 재단도 많다. 사립대학의 설립자들은 설립당초 전 재산을 출연하였기 때문에 설립후 더 이상의 출연을 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출연형태도 수익사업체보다 부동산으로 이루어졌으니 수익에 따르는 전입금 마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립대학 재정의 또 다른 충당원은 사회의 寄附金으로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창 및 사회 각계로부터의 기부와 각종 재단으로부터의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기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대학 등 공익적 사회(교육)사업기관에



東國大 總長 閔 丙 天

기부하는 일이 흔하지 않다. 기부를 '주고 받는 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거액을 내놓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조건없이 인재양성에 써 달라고 기부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아마도 동양적 문화와 자손상속관 때문인 듯하다. 금융실명제와 세제가 확립되면 기부문화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대학재정의 가장 중요한 총당원은 國庫補助로 대학재정의 1.7% 정도에 이른다. 대학이 자체수요로 인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회에 활용할 인재를 기르는 것이라면 국고지원은 당연하며 그 비중이 훨씬 커져야 마땅하다. 사립대학은 국가에서 할 일을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고보조가 사립대학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국고보조가 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10% 부담에 비하면 1/7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에 비하면 더하다. 사립대학의 재정총원이 이리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시대상황에서 사학들은 빛을 지고 운영을 포기하기까지 이른 학교도 생겼다. 교수확보, 시설확충, 기자재보완 등 교육여건 개선과 정부가 정한 기준의 2/3에 이르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정 때문에 부채를 지고 운영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私學의 財政難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사회, 학교와 재단이 모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교육재정의 확보(GNP의 5% 약속이행)와 그것을 위한 교육세법 체계정비에 병행한 사립대 또는 대학 육성을 위한 育成法 등 제도화를 강구하고 국고보조를 현재 수준에서 매년 2~3배씩 증액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社會 認識의 긍정적 전환이 요구된다. 대학별 모금, 사학육성금고모금, 기업인들의 참여, 개인기부 등 각종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성합격하다.

정부와 사회의 지원과 더불어 재단과 학부모 및 대학의 自救 努力도 필수적이다. 등록금의 인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학부모와 학생이 이해해야 할 것이며, 재단은 학교당국 및 동창회와 협력하여 전입금 증액 및 기금조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모든 관련자들이 대학육성을 위한 고동분담과 노력분담을 할 때,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양질의 교육과 우수인력의 배출에 따르는 선진화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